

시 정 질 문(서면)

김영남 의원

□ 질 문

- 첫째, 현재 부천시에서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차량의 단속문제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달 들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스티커 발부율이 하루 평균 1,100대로 전달의 하루 평균 400여 대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여 무차별 주·정차 위반차량을 단속하여 부천시가 돈벌이에 급급하다는 시민들의 원성을 듣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행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무등록 공장의 기준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4조3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 의무범위인 500㎡ 이상으로 하여 500㎡ 이하인 수많은 무등록 공장에 대해 도시형과 비도시형에 대한 파악조차 되어있지 않은 상태인데, 소규모의 무등록 공장들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환경보호 차원에서 본다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기에 이들 소규모 공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500㎡ 이하의 무등록 공장의 수는 얼마나 되며, 공해가 발생하는 비도시형 공장에 대한 부천시의 향후대책과 공업지역의 환경개선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의 뿌리는 공장이라고 보기에 생산공장에 대한 환경개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 셋째, 구 원미구청 청사의 개보수가 완료되어 입주업체로 선정된 기업들이 입주를 시작하면서 벤처창업보육센터로서의 역할이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1층은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단체가 입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하실의 사용계획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지하공간의 활용 대안으로 부천시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제품 판매장 개설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 넷째, 대형유통업체들의 부천 등장으로 재래시장의 상권이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및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의원

□ 질 문 1 : 사회복지관의 1관 1관장 및 1부장제 이행 요구

- 춘의·한라·고강사회복지관은 시에서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에 위탁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 춘의·한라사회복지관은 영세민 밀집 아파트 지역으로서 다른 지역보다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복

지관입니다.

- 그러나 운영주체인 가톨릭학원에서는 구조조정 차원이라는 명분하에 1명의 관장이 3개의 복지관을 관장, 운영하여 오고 있는 바 복지관 운영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미흡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춘의와 한라사회복지관에 부관장 1명을 두고 있어 3개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원이 6명이나 현재 3명뿐입니다.
- 이러한 관리상 문제점이 있는 바 시장께서는 지금의 부관장 제도를 폐지하고 복지관별로 각각 관장 1명, 부장 1명을 두는 것으로 개선 요구합니다.

□ 질 문 2 : 복지관명 앞에 법인의 로그와 법인명 표시 개선

- 춘의·한라·고강사회복지관은 시에서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에 위탁 운영하여 오고 있는 바.
- 현재 위 3개 복지관에서 발행하는 각종 홍보 유인물은 물론 현판, 입간판의 복지관명 앞에 부천시명과 부천시 로그가 아닌 가톨릭학원명과 가톨릭학원의 로그가 새겨져 있습니다.
- 이는 마치 복지관을 가톨릭학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비추어지고 있으며 시민들을 혼란하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복지관명 앞에 가톨릭학원명과 로그가 아닌 부천시명과 로그로 바꾸는 것을 요구하오니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 질 문

○ 공해배출업소 관련

1. 이번 행정감사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부천시 관내의 대기 및 수질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위생과의 관리 및 지도 감독이 거의 형식에 그치고 있다.
 대기배출업소는 서류상으로, 수질배출업소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지도 점검함으로써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이 효과적이고 실효성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부천시의 대기 및 수질 등의 환경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부천시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현재까지의 형식적인 관리체계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관리 및 지도 단속을 위해 획기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과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2. 부천시 관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수많은 소규모 무허가 공해배출업소가 많지만 이에 대한 현황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전혀 지도 단속을 못 하고 방치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

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관리 및 지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리라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3. 소형소각로에 대해서도 전혀 지도 단속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환경오염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불법적인 소각이나 소각재처리에 대한 철저한 지도 단속과 지속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데 어떻게 관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4. 중동소각장의 위탁운영이 올해말로 끝나는데 중동소각장의 위탁운영업체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5. 대장동 소각장도 내년 3월부터는 시험가동될 예정인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위탁운영한다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달라.
6. 대장동 하수처리장에 1일 600t 용량의 슬러지소각시설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 1) 폐기물처리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대장동에 다시 또 600t 용량의 소각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환경오염의 가중 등 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리라고 본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2) 최근 고양시에서도 하수슬러지를 비농업용퇴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비농업용퇴비 처리가 소각시설 처리보다 비용면에서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다고 보는데 부천시에서도 이러한 방법들을 비교검토하여 가능한한 비농업용퇴비시설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람.

○ 원미환경 차량관련

1. 4.5t 복사진개 1983년식 경기8러9635, 9331, 1984년식 경기8러9634 등 3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에는 모두 1994년 7월 12일자로 폐차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원미환경 차량보유현황에는 95, 96년까지 보유한 것으로 되어있고 차량운행비를 지급하였다.
이에 대한 상세한 경위를 밝혀주고 위의 사실이 틀림없다면 책임의 소재는 어디에 있는 것이며 상기 폐차된 차량에 대해서 부당하게 지급한 차량운행비는 얼마인지 밝혀주기 바람.
2. 93, 94년 원미환경 차량보유현황에 나타나 있는 경기8러1009, 1012, 1017, 1019 등 4대의 차량등록원부를 보면 경기8러1009는 웅진군청 소유차량으로 95년 말소되었으며 경기8러1012, 1019 2대는 광명경찰서와 광명시청 소유차량으로 92. 8. 21일과 92. 5. 18일자로 폐차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경기8러1017은 부천시 소유차로 92. 6. 8일 폐차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차량들이 어떻게 해서 93, 94년도 원미환경 보유차량으로 되어 있으며 차량운행비를 지급하게 되었는지 상세한 경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밝혀주기 바람
동차량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한 차량운행비는 얼마인지 밝혀주기 바람.
3. 96년도에는 95년보다 부천시의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상당히 감소하였는데 원미환경 차량은 11대

가 증가한 86대가 되었다. 부천시에서 제출한 원미환경 장비현황을 살펴보면 96년도에 증가한 차량내역은 경기7러1009, 1012, 1017, 1019, 8러1083, 9163, 9164, 9165, 1076, 1077, 1094 등 11대이며 상기 차량들의 연도별 보유현황을 보면 91년도에는 상기 11대의 차량이 모두 나타나 있고, 93년도에는 7러1009, 1012, 1017, 1019 등 4대는 없으며 94년도에는 8러9163, 9164, 9165 등 3대만 나타나 있고 95년도에는 상기 11대의 차량이 한 대도 보이지 않다가 96년도에 상기 11대의 차량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상기 11대 차량의 차량등록원부를 보면 7러1019, 1017, 1009, 1012, 8러9164, 9165, 1077 등 7대는 97년 9월 25일 폐차되었으며 8러1083, 9163은 96년 11월 8일과 97년 1월 8일 83가8213과 88가8250으로 대체차되었다.

- 1) 96년도에는 95년도보다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상당히 감소하였는데 어떻게 해서 11대의 차량이 증가한 것인지 그 경위를 상세히 밝혀주기 바람.
- 2) 증가된 11대의 차량이 92년도부터 보유현황에 일부만 나타나 있다가 95년도에는 모두 없어졌다가 96년도에 다시 나타나게 된 경위에 대해 상세히 밝혀주기 바람.
- 3) 상기 11대의 차량에 대해 96년도에 지급한 차량운행비는 얼마인지 밝혀주기 바람.
- 4) 이 문제와 관련해 책임의 소재는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밝혀주기 바람.

4. 경기8루8772, 8773, 8774, 8775, 8776, 8777, 8778, 8789, 8790, 8791 등 10대의 차량은 92년식으로 4.5t 압축진개차인데 차량보유현황에는 6.5t으로 92년도부터 97년도까지 나타나 있고 98년도에는 사실대로 4.5t으로 바뀌어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경위와 6.5t으로 차량운행비를 지급함으로써 부당하게 과다 지급한 금액은 얼마이며 이러한 과오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밝혀주기 바람.

○ 96년도부터 원미환경의 운영비와 이윤 산출의 문제점

96, 97, 98년도 원미환경에 대한 도급료 산출 중 운영비와 이윤의 산출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8조 1항과 2항의 규정을 무시하였다고 보아집니다.

즉 계약사무처리규칙 제8조에는 운영비를 산출함에 있어 인건비, 재료비, 수선비, 차량운영비의 합계에 5%, 이윤은 인건비, 재료비, 수선비, 차량운영비, 일반관리비의 합계에 10%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천시에서 산출한 내역을 보면 포함해서는 안 될 퇴직금까지 포함하여 계산하여 운영비와 이윤을 과다 산출함으로써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을 원미환경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운영비 약 3600만원, 이윤 약 4900만원, 97년도에는 운영비 약 2500만원, 이윤 약 3000만원, 98년도에는 운영비 약 5000만원, 이윤 약 1억원을 과다산출하여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경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밝혀주기 바람.

□ 질 문

1. 쾌적한 환경의 도시 부천 건설을 위해서는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혼재되어 환경오염이 극심한 오정구 삼정동, 내동, 오정동, 원미구 도당동, 약대동, 춘의동 등 지역의 중장기적인 도시계획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계획은?
2. 도시계획법의 개정 임박으로 부천시에서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앞으로는 보상 또는 도시계획 해제가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부천시 관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은 어떠한지 용도별로 번지, 면적 등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부천시는 재정문제를 포함해 이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재 중동소각장에는 단독지역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생활쓰레기만이 반입되고 있는데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역전담제 실시 이후 중동소각장의 쓰레기 반입은 어떻게 할 예정인가?
또한, 대장동소각장 가동 이후에 대장동소각장과 중동소각장의 쓰레기 반입계획은?
또한, 향후 부천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대장동소각장에서 모두 처리할 경우 중동소각장은 당연히 가동중지 폐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4. 외자유치 음식물 시설과 관련하여
 - 1) 부천시에서는 그간 unisyn사의 외자유치 음식물 시설의 대장동 유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에서 부천시의 조건을 unisyn사에서 다 받아들여기로 함에 따라 unisyn사의 시설을 유치카로 방침이 급선회하였다고 하는데 어떠한 조건들이 어떻게 수용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 외자유치 음식물 시설의 확정에 앞서 관계전문가, 환경단체,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언제쯤 어떻게 개최할 예정인가?
 - 3) 그간 시민단체에서 부천시에 강력히 요구한 사항으로 대장동에 대규모 음식물 시설을 유치할 경우 강서구 오곡동 소각장, 계양구 소각장은 부천시 경계에서 2km 이상 이격 건설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대해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환경부 및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의 입장은 무엇이며 부천시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4) unisyn사의 혐기성 연료화 발효시설은 하와이의 plant 노하우만 가지고는 기술 검증에 문제가 있으며 국내의 순수 음식물 쓰레기를 투입, 일정기간 pilot실험을 거쳐야 한다는 경기도 폐기물 관리과의 검토 의견도 있는데 반드시 이러한 과정 후에 대규모 시설의 유치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5) 2,000톤의 대규모 광역화 시설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 및 교통영향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 6) unisyn사와 경기도간의 기본계획서 체결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현황과 기본계약서(안)의 제출을 바라며, 그 이후의 unisyn사와 부천시간의 추진계획을 밝혀 주고 unisyn사와 부천

시간의 실행계획서 초안이 있으면 제출 바람.

또한 현재 unisyn사와 경기도, 부천시간의 쟁점 및 이견이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 7) unisyn사의 음식물 시설이 25년 이후에는 시설의 노후화로 아무 쓸모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장이 어려운 것 아닌가?

이에 대한 답변 바람.

- 8) 광역화 시설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의 물량 확보가 장기적으로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보는데 몇 톤 이상을 의무적으로 반입하기로 하는 것인지?

또한, 물량 확보가 안 되었을 경우 그 책임과 조건은 무엇이며, 경기도와 부천시 어디에서 어떻게 책임을 지는 것인가?